

“네팔, 이리 와”...현장에서선 이름도 없었다

위기의 전남 이주민

전남 농어촌지역과 산업현장 곳곳에서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는 이미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돈을 들여 데려왔다’는 왜곡된 인식과 도움을 청할 곳 없는 취약한 존재라는 이유로 폭력과 편견에 노출되고 있다.

◆‘돈 주고 데려왔다’... 차별·폭력 일상

베트남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해 한국에 온 A씨는 결혼 전 ‘코리안 드림’을 꿈꿨다. 남편은 “같이 돈 벌고, 아이 키우며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아예 판 사람이 됐다. 술만 마시면 “여긴 한국이야, 네 나라 아니야”라며 겁박했다. 시부모도 아이 앞에서 베트남어를 쓰면 “너네 나라 말 쓰지 마. 애가 이상하게 배워”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A씨는 “내가 이 집 식구가 아닌 것 같다. 돈 주고 데려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점점 위축된다”고 털어놨다.

전남의 한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국적 B씨는 첫 출근날 한국인 관리자가 자신의 출신 국가나 이름조차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관리자는 그를 보자마자 “네팔! 야, 이리 와!”라며 작업을 지시했다.

이후 현장에서선 욕설과 모욕이 일상이었다. 제품이 불량이면 반장들은 “외국인이라 머리가 나빠서 그래”라는 등 면박을 줬다. 구내식당에서 일부 한국인 동료는 이주노동자들을 피해 다른 테이블로 옮기며 “냄새 난다”고 대놓고 비웃는 일도 다반사였다.

B씨는 “점점 내가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느껴졌다. 같은 나라에서 온 동료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름이 불릴 때 겨우 위안을 얻는다”고 토로했다.

폭력과 차별이 비극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다. 지난 12월9일 보성군 벌교읍 한 주택에서 50대 남편이 딸다툼을 벌이던 베트남 출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나주에서는 지난해 2월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은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 유린 영상이 퍼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주여성 절반 가정폭력 경험...사회 폭력도 52.1%

이주민을 대하는 사회의 차별이나 폭력 행위는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19일 전남 이주여성상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전체

‘돈 주고 데려왔다’ 소유물 취급...인권침해 노출 전남 이주여성 2명 중 1명은 배우자에게 폭력 통제·감시 일상...시부모 등 폭력 경험도 68.3% 사회에서 폭력 52%·언어폭력 68% 겪어 ‘다반사’



전남 나주 소재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어졌던 가혹행위가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제공

상담 건수는 2023년 2960건에서 2024년 4064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686건까지 늘었다. 2년 새 58.3%(1726건) 늘어난 것이다.

지난 한해 상담 유형을 보면 가정폭력(488건)과 이혼(642건), 가족문제(107건), 부부갈등(67건) 등 가정 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이밖에 성폭력 46건, 데이트폭력 35건, 스토킹 31건 등 범죄에 노출된 사례도 상당했다.

실태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남 이주여성상담소가 2020년 발표한 조사(전남 이주여성 403명 대상) 결과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49.9%에 달했다. 2명 중 1명 꼴이다.

폭력은 반드시 주먹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배우자로부터 ‘항상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다’는 응답(복수응답)이 52.3%에 달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30.9%), ‘병원에 가려면 허락을 받게 했다’(30.6%) 등 통제와 감시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폭력을 경험한 여성 가운데 42.4%는 폭력이 결혼 1년 미만이 시작됐다고 답했다. 결혼 1~5년 미만이 30.5%였다. 결혼이 안정의 출발이 아니라, 권력 관계가 굳어지는 시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의미

다.

가정 폭력과 불화는 배우자에게서만 시작된 게 아니었다.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68.3%에 달했고, 학교나 직장 등 사회에서도 절반 이상인 52.1%가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62.5%는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혀 일상에서 차별이나 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조사에서 폭력을 당할 때 ‘그냥 있었다’(41.8%)는 이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낯선 타국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남 한 이주여성상담사는 “일부 가정에서 ‘돈을 들여 결혼했다’는 왜곡된 인식이 남아 있다. 그 인식이 배우자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며 “낯선 타국 생활 속 주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는 점도 이들에겐 큰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여성이든, 이주노동자든 한국 사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며 “폭력은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불균형 구조와 왜곡된 인식 속에서 시작돼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학대 미수’ 처벌 없고 재물 취급 받는 반려동물... 근본 대책 없나

동물학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용의자들을 처벌하는 법규정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 있는 예방과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광주·전남에서는 매년 동물학대 신고와 검거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이달까지 집계된 지역내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총 1094건(광주 444건·전남 650건), 검거 건수 213건(광주 55건·전남 158건)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동물학대 신고 건수가 2023년 145건을 기록하다 이듬해 155건, 지난해 132건 등 꾸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벌써 동물학대가 12건이 신고된 가운데 검거 또한 2023년 15건에서 지난해 21건까지 줄곧 오름세다.

전남지역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209건으로 동일한데 이어 지난해 212건으로 늘었다. 검거 건수도 2023년 53건, 2024년 57건, 지난해 48건 등 해마다 적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 내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설 연휴 전남 나주 반려견놀이터에 대해 낫시바늘이 든 빵이 발견된 사건처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미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체계에서 반려동물은 정서적으로는 가족으로 인식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재물’로 분류되고 있다. 민법은 동물을 별도의 권리 주체로 규정하지 않고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반려견 역시 소유·양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반려견놀이터 낫시바늘빵 사건, 동물학대 미수 처벌 ‘공백’ 재물손괴 처벌 한계 뚜렷하고 공중합박죄 성립도 ‘불투명’

이 때문에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처벌의 기준은 동물의 고통보다는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맞춰진다.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경우 최고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데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미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적용될 형량은 위험성에 비해 극히 낮을 전망이다.

동물보호법이 가진 맹점도 문제로 꼽힌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학대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이는 동물에게 고통을 준 행위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에 ‘학대 미수’를 처벌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 상해나 죽음 등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공중합박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중합박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전제로 하고 있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이를 인식해 설치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반려동물만을 노린 행위라면 당사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공중합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나주 반려견놀이터 사건처럼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 혐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법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와 달리, 법 체계는 여전히 재산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번 사건은 반려 인구나 동물을 향한 테러 시도나 다름없다. 반려견 전용 공간에 위험한 물건을 교묘히 숨겨 버린 뒤 달아났다는 것은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동물학대 미수에 그치지더라도 위협성과 여파를 고려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법부도 해당 법을 폭넓게 해석해 동물을 향한 테러 시도가 더는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나주시 반려견놀이터에서 낫시바늘이 박힌 빵이 발견됐다는 글이 게시됐다. 현장을 확인한 나주시는 반려견 놀이터 내 쓰레기통 등에서 낫시바늘이 박힌 빵 5개를 발견했다.

또 CCTV를 통해서도 14일 오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 놀이터에 낫시바늘 빵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버리고 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반려견놀이터를 중심으로 반경 수km 안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낫시바늘 빵을 버리고 간 용의자를 쫓고 있다.

/전민규 기자

‘광주다움 통합돌봄’ 성과 지자체들과 공유의 장 마련

‘전국 돌봄대회’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3월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가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27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지역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다음 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광주의 통합돌봄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한다.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와 전문가, 서비스기관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해 지

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실행 전략과 전국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김용의 돌봄과미래 이사장이 ‘돌봄, 지역이 주인공이 되다’를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총 16건의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공공의료돌봄, 방문구강교육, 식사지원, 동행지원, 의료기관 협업, 자치구-대학 협력모델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전국의 돌봄 종사자와 공유한다.

또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홍보부스를 통해 자치구 특화사업, 민관협력 모델, 돌봄 인재양성 프로젝트 등 광주의 현장 성

과를 전시한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초·중·고등학교를 둔 학부모를 지원하는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로자 조식 지원 등을 추진했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에 ‘통합돌봄’ 과제를 운영해 전문인력 양성, 현장 실습·연구, 정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며 지역이 주도할 때 가장 강력해진다”며 “광주형 돌봄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